

“유치원부터 대입까지 책임지겠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전북교육감 출마 공식화

“학교교육을 중심에 둘 것… 정치적 행보 수단돼선 안돼”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하겠다” 1호 공약 발표도

“전북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부터 대입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출마로 3번째 도전인 황 전 부교육감은 “그간의 교육감 수업으로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역량을 쌓았다”며, 이날 출마선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고하고 결연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을 중심에 두겠다”며, 교육감이 정치적 행보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학력신장, 미래역량 등 그동안 목표민을 외쳐온 데 문제를 제기한 그는 “목표 달성의 구

체적인 방법과 함께 결과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AI 기반 문해력 증진 시스템 플랫폼’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놴다. 이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정책으로, 교육·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전략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어 “무너지고 있는 전북교육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교육감, 실효 있는 교육감, 전북교육을 경험한 교육감이 필요하다”면서 “유·초·중·고 교육의 비전문가인 대학 교수나 총장이 전북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자신



황호진 전 부교육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부터 대입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황 전 부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고교까지가 아닌 ‘대입’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유치원에서 대입까지 황호진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분야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 학교정책실,

고등교육실, 대통령실 등에서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온 교육전문가다. 또한 교육외교관으로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선진국의 현장 교육정책을 연구한 OECD 국제 교육전문가이기도 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의 목소리’

13일 전북대서 공식 출범

학부모·교사·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 최초의 시민 참여형 교육 플랫폼 ‘전북교육의 목소리’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전북교육의 목소리(대표 최미영)’는 행정과 특정 집단 중심으로 흘러왔던 기존 교육 논의를 넘어, 교육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 시민단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전북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 창립식은 ‘전북교육 10년 후, 꿈꾸는 학교’를 주제로, 인구절벽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 시대 속에서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아실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미래 비전을 국민의 목소리로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전북교육의 목소리’는 창립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적 역할을 하겠다’며 “아이들이 인간의 가치를 지키며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북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는 전북 지역 학부모와 교사, 교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단체는 출범 이후 교육감 출마 예정자 초청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다문화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활용 역량 강화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6일 장수군 어울림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정보 서비스 설명회 및 실습 연수를 운영했다.

학부모들은 번암초등학교동화분교 강대호 교사의 안내로 교육정보서비스 활용 방법을 배우고,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학교교육 이해자료(다국어 번역본)’를 활용에 실제 학교생활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가족 푸드테라피(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높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5일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K-STAR 비자트랙’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참여대학 지위를 부여받았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선정

전북대, 완결형 글로벌 인재 플랫폼 갖춘 핵심대학으로 인정받아

총장 우수 외국인 추천 권한… 3년 후 영주 부여 등 파격 혜택

전북대학교(총장 양우봉)가 법무부의 신규 혁신 인재 정책사업인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인 인재가 학업·연구·취업·정주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결형 글로벌 인재 플랫폼을 갖춘 핵심 대학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전북대는 지난 5일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K-STAR 비자트랙’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참여대학 지위를 부여받았다.

K-STAR 비자트랙(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 Resources)은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업·연구·취업·영주로 이어지는 체류 루트를 국가가 직접 구축한 새로운 제도다.

그동안 KAIST 등 5개 과학기술원에

만 적용되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의 위상과 역할 역시 크게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 양우봉 총장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추천 인재는 △졸업 즉시 취업 요건 없이 거주(F-2) 자격 부여 △3년 후 영주(F-5) 신청 가능 △우수 연구실적 보유 시 체류기간과 무관한 특별귀화 신청 가능 등 파격적 혜택을 받는다.

전북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석·박사급 외국인 연구자들이 학업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다.

/장은성 기자

특히 융복합 소재·부품, 농생명 융합, 미래 수송·기계 등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산업체의 수요와 연결되는 ‘정착형 글로벌 인재 순환 모델’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혁신역량 강화와 연구중심대학 비전 실현이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대는 국제처를 중심으로 K-STAR 전담 플랫폼을 마련하고, 외국인 인재의 한국 생활 적응부터 연구지원, 지역 정주 프로그램까지 총괄하는 지원체계를 대학원혁신부 등과 협업해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BK21·글로벌대학30·RISE 사업 등 핵심 전략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양우봉 총장은 “전북대가 글로벌 우수 인재의 안정적 정주와 연구활동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과학기술 인재의 ‘유학·연구·취업·정주’ 순환 모델을 완성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교원 대다수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 권리 가져야”

전북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가 93%가 “찬성”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전북 지역 교원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지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구성은 △만22세~29세 3.2%(18명) △만30세~39세 30.3%(169명) △만40세~49세 38.7%(221명) △만50세~62세 27%(151명)였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91.1%(51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 93.7%(523명)가 찬성, ‘정치 후원금 기부 가능’에는 95.3%(529명)가 찬성, ‘피선거권 보장’에는 92.1%(514명)가 찬성, ‘정당 가입 허용’에는 93.2%(520명)가 찬성했다. 이

는 교사들이 단순히 교육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의 정치기본4법 보장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시스템이 지키는 전북교육 청렴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시 기반 시스템 구축 등
청렴 혁신 7대 패키지 발표



함께하는 ‘청렴 시민평가단’ 구성 △내 부고발자 보호 3중 장치 도입 △학교 단위 ‘청렴지수 공개제’ 시행 등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이 UN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앞두고 전북교육 청렴 혁신 7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렴 신뢰가 무너지면 교실, 행정, 지역교육 생태계 모두가 흔들린다”며 “자람이 지키는 청렴이 아니라, 구조가 지켜내는 청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렴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권리가 흔들린다”면서 “인사·민원·계약 등에서의 불신은 교육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전 총장은 “전북교육의 청렴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혁신을 위한 청렴 혁신 7대 패키지를 제시한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기반 ‘청렴행정 시스템’ 구축 △독립 ‘전북교육 옴부즈만’ 설치 △블라인드 인사·인사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 △계약·조달 ‘원클릭 투빙’ 공개제 △학부모·교사·학생이

이다.

특히, 시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약·입찰·용역 등 모든 의사결정은 물론 평가 기준에도 AI가 분석하거나 감지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교사·학생이 참여하는 청렴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교직원들의 청렴 체감도 상승과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와 관련된 기준도 공개한다.

이 전 총장은 “전북교육의 미래는 신뢰 위에서만 세울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을 다시 도민과 지역사회의 품으로 불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은 교육의 기초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며 “타인의 창작물과 성과를 도용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인정’

전북교육청,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우수교육청 선정

사후관리 강화 · 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서 높이 평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성과 공유회’에서 경기·서울교육청과 함께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북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강화 및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정비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건축사·학부모·교육지원청 담당자로 구성된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단’을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보호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후관리단은 착공 중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공사 차량 진출입구 변경, 타워크레인 변경 등 교육환경평가 미이행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또 교육환경 보호 정책·평가 업무지원 전문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부안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도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부안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수기대장 전산화 △현장 점검을 통한 GIS 기반 보호구역 현황화 △폐교·출입문 위치 변경 등 학교 여건 변화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고시 △지자체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 등을 추진해 행정 효율성은 물론 민원 해소와 공공데이터 신뢰성 향상에 기여했다.

/장은성 기자

AI 세대 위한 맞춤 수업, 학교로 간다

전북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스쿨 운영

전북학생의회 제안 정책 반영 사례… AI 디지털 소양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의 AI 디지털 역량 배양 및 학기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지원하고, AI 디지털 리터러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도내 2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스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2025년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발의된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은 학교별 교육과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된다.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디지털 저작권 이해,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AI 창작 체형 등 시의성과 교육적 효과가 높은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디지털 괴롭증, 저작권 인식, 생성형 AI의 사회적 쟁점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을 주제로 토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고력을 함양하도록 설계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제안을 반영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직접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형 정책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